

# “근로자 구금, 기업들 투자고민할 것… 특별재판부 위험 아냐”

150분에 걸쳐 22개 질문 소화  
대미 투자, 합리적 귀결 자신감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비판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과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

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당황스러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

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치 이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저는 합의 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험(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왜 위험인가”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금리인하 시기, 집값·가계부채 증가폭이 좌우”

수도권 주택시장 거래 둔화 확인  
잠재 수요 여전… 가격 상승세 높아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소비자의 주택가격 기대에 따른 집값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2025년 8월 통화정책방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

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구체적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담보제한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수도권 내 주택구입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겹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7월 서울 지역에서 8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7월 36.8%로 14.5%포인트(p) 줄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 33.9%에서 23.2%로 10.7%p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7월 이후에도 상승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집값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여전히 리스크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재보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은 재차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SK하이닉스, AI…’서 계속

## 세계 낸드시장 본격 진출 “고객 요구제품 적시 공급”

김주선 사장 “차별화 경쟁력 구축”

구글은 지난달 스마트폰 ‘픽셀 10’ 시리즈를 출시하며 512GB와 1TB 모델에 ‘ZUF’ 낸드를 적용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스마트



폰 내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ZUF 낸드를 탑재했다.

ZUF(Zoned UFS)는 고속 플래시 메모리 규격이다. 데이터를 용도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Zone)’에 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체제(OS), 앱 캐시, 사진·영상 등 데이터 특성에 맞춰 저장 위치를 다르게 한다. 스마트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AI’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기존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UFS)’를 확장한 규격이다.

ZUF 4.1은 UFS 4.1 대비 장기 사용시 발생하는 읽기 성능 저하 현상을 4배 이상 완화한다. 앱 실행 시간은 UFS 대비 45% 단축하고, AI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간도 47% 개선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오류 처리 능력을 지난해 5월 개발한 4.0 버전 대비 대폭 강화했다. 오류를 더욱 정밀하게 감지한 뒤 중앙 제어 장치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과 복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CMO·사진)은 “ZUF 4.1은 안드로이드 OS와 저장장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협업해 개발·양산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요구하는 낸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AI 메모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건설업 단기부양책, 장기회복 도움 안돼” “美 관세에 韓 성장률 0.45%p·0.6%p ↓”

투자 회복 위한 구조조정 제언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오히려 자본을 부동산 중심으로 쏠리게 해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 건설투자 제약,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건설 투자 회복이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3~2017년 중완화적 금융여건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부분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7년 자금의 부동산 쏠림으로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투자가 장기간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이날 한은은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수요에도 토지가 부족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박 부총재보는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 및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철강·자동차 등 파장 확산 전망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0.45%포인트(p), 0.60%p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성장률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교역이 위축되며 올해 성장률을 0.23%p, 내년 성장률을 0.34%p 내렸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품목별로는 대미 수출비중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업종이 관세 정

책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나라의 무역경로 외에도 금융경로의 불확실성도 커지게 했다.

이날 박 부총재보는 미국의 관세정책의 여파가 앞으로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관세가 점차 전가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수입이 2분기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철강,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도 미국 내 자동차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영향이 점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